

# 안전문화 형성이 시급하다

**지** 난해의 일이다. 7월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 가스사고를 계기로 정부 및 관련단체 주관하에 LNG생산·공급기지에서 일반가스사용시설에 이르기까지 가스시설 전반에 대하여 우리의 현실여건이나 제도를 떠난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점을 해석하고 선진국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습득하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의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진단을 실시한 일이 있었다. 진단결과 많은 개선사항이 모아지고 선진적 발전방향이 제시되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충격적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은 진단에 참여했던 일본전문가의 한마디였다. “왜(법에서, 기준에서) 정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는 진단중 가본 현장여건에 맞춰 시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진단기간 내내 그를 이해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문화적 안전의식의 차이점을 실감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도 이제는 ‘안전’에 관한한은 정한대로 지킬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곧 ‘안전문화’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찾아낸 것이다.

이미 규제를 통한 강압적인 안전관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곳곳에서 규제안전관리의 비효율성을 내세워 자율안전관리를 표방하고 있고, 안전에 관련된 모든 행정 및 산업도 부가가치의 창출에 부합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또한, 우리는 IMF체제를 맞이함으로써 안전관리기반에 대한 집중투자로 그 전반적인 수준을 올리고 그 기반하에서 자율안전관리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려던 계획을 한 템포 늦추게 되었다. 기업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의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안전’은 현대사회에서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되는 절대적 요건이므로 지금 까지의 안전관리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그 대안으로 ‘안전문화’ 곧 안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전문화’가 담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95년 우리는 고귀한 101명의 목숨을



김정희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

앗아간 대구지하철공사장의 가스폭발사고를 경험했다. 그 이후 굴착공사시 시공자의 매설배관 확인과 도시가스사와의 시공협의를 제도화했고, 가스배관 지리정보시스템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 결과로 95년 57건에 달하던 타공사사고는 96, 97년 각 30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굴착공사로 가스배관을 파손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배관주위에서 굴착기계 조종사의 경험에 따라 굴착시공케 하는 안전체제의 정착도 미흡한 실정에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굴착공사장을 일일이 행정력으로 규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곳에 ‘안전문화’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배관주위에서는 굴착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반드시 인력굴착을 해야하는 것을 굴착기계조종사, 시공책임자 모두가 빠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회적인 압력이 있어야 한다.

‘안전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안전’을 국민실생활에 보다 근접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나가 철저히 감시자가 되어야하고 정부는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 탄력적인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되 꼭 준수해야 할 요건을 이해치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를 해야한다. 일선의 안전종사자 및 기업들도 구호에 그치는 안전관리를 탈피하여 실제적인 안전역량을 발휘도록 행동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합의된 최소한의 규제는 정한대로 반드시 지키는 사회적 공감대를 시급히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안전문화’의 요체이다.

그러나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던 선진외국의 경험을 감안하면 ‘안전문화’ 형성에 시일이 훨씬 오래 걸릴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